

세입자, 소득 30% 이상 월세로 지출



▲ 미국 세입자들의 평균 월세 지출률은 소득의 30% 이상이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에서 주택 임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가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평균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면서 이 업체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30%를 찍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가구를 '월세 과부담'으로 정의하는데 이제는 미국의 평균 세입자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쓰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전국 단위에서도 30%를 넘은 것은 많은 이들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치매체 '더힐'은 평가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 많은 가구가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아파트 임대로 물리면서 아파트 월세가 급등했다. 근본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주택 가격과 월세가 꾸준히 올랐다.

그러나 소득은 월세만큼 오르지 못해 저·중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은 40%를 넘었다.

주별로는 매사추세츠(32.9%), 플로리다(32.6%), 뉴욕(31.2%) 등의 주택 임대료 부담이 가장 커졌다.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뉴욕(68.5%)이며, 그 다음은 마이애미(41.6%), 포트로더데일(36.7%), 로스엔젤레스(35.6%), 팜비치(33.6%) 등이다.

낱말퍼즐 정답

¹ 얼	룩			² 마	사	³ 지	
간		⁴ 눈	⁵ 대	중		⁶ 장	⁷ 기
⁸ 이	⁹ 승		명				와
	¹⁰ 무	법	천	지		¹¹ 고	집
¹² 음	원		지		¹³ 내	¹⁴ 조	
악				¹⁵ 피		¹⁶ 선	조
¹⁷ 회	¹⁸ 식		¹⁹ 오	디	션		명
	²⁰ 비	수	기		²¹ 강	등	

난관 부딪힌 '바이 아메리카' 정책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과 노동자 지지 확보를 위해 내세운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바이 아메리카'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기반 시설 사업에 쓰이는 철강 및 건축 자재는 물론이고 목재, 유리, 석고, 광섬유 등도 미국산 제품을 특정 비율 이상으로 써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산 제품을 쓰고 싶어도 유통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해외산이어서 사용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미 교통부는 "부두 크레인, 선박 리프트 등 수입 화물장비 구입에 연방정부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항만당국의 신청을 기각했다. '바이 아메리



▲ 지난 8일 위스콘신주의 북미노동자국제노조 훈련 센터에서 '바이 아메리카'에 대해 연설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품 구매를 늘리는 정도로 25조 달러의 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인프라 사업에 쓰이는 철강과 건축 자재의 최소 55% 이상을 미국산 제품으로 쓰도록 했으며 이 비율도 올해부터는 60% 이상, 2029년 75%로 늘어난다.

"이르면 6월 정부 현금 고갈... 부채한도 상향해야"

이르면 올여름에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바이파티안 정책센터(BPC)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올여름이나 늦어도 가을까지는 'X 테이트'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X 테이트'는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날을 의미한다.

사이 아카바스 BPC 경제정책 담당 국장은 "6월 초부터 중순 사이 연방정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에 가깝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X 테이트의 도래 시점을 7~9월로 예상했다.

BPC는 연방정부의 디플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고려해 정치권이 조당적으로 부채한도 상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다.

재무부는 현재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특별조치로 디플트 사태를 피하고 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내걸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2월 1일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백악관에서 담판을 벌였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1461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9	3			4			7
1		5		8			
8			3		9	1	
		9			4	3	1
4	6						7
7			9	3		4	
					7	9	5
		6	5		1		
		9	4	3		6	